

조지아 반이민법, 조지아 하원 의안 87(일명 HB 87) 관련 자료

<HB 87 처리 경과>

- 2011년 1월 27일: 공화당 매트 램지(Rep. Matt Ramsey)가 의회법안 HB 87 제출됨
- 2011년 4월 14일: 조지아 주의회에서 수정된 HB 87이 통과됨
- 2011년 5월 13일: 주지사 네이튼 딜 (Nathan Deal)이 HB 87법안을 서명하여 HB87이 법이 됨
- 2011년 6월 2일 : HB 87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출됨
 - 2011년 6월 20일: 토마스 쓰라쉬 (Thomas Thrash) 판사에 의해 HB 87소송건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됨
 - 2011년 6월 27일: 쓰라쉬 판사는 HB 87의 일부분을 임시로 막거나 HB 87의 일부가 효력 발생하는 것을 금지함. 구체적으로, 제7조 및 8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함.
- 2011년 7월 1일: 아래를 제외한, HB 87의 모든 조항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함
 -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공공 보지 혜택(제17조)
 - 전자신분인증제도 (일명 E-Verify, E-인증 제도)의 효력 발생일자:
 - 2012년 1월 1일 -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인 경우
 - 2012년 7월 1일 -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인 경우
 - 2013년 7월 1일 -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인 경우
- 2012년 8월 20일: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제7조위 법적 효력을 막는 아래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면서 제7조의 일부를 뒤집음. 그리고 제8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법원으로 다시 환송됨. [판결](#)
- 2012년 11월 26일: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HB87을 인정하며 제7조에 대한 재고는 거부함

*** HB 87의 조항 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조항이거나 더 이상 조지아의 법이 아닙니다.**

<HB 87 법적 효력>

HB 87은 연방 정부의 관할인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(州)에게 부여함으로써 주(州)의 힘을 확장시켜줍니다.

- **경찰은 경찰이 수사 및 조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(제 8조):**
의심이 가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용의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 조사기간 동안 경찰은 만약 용의자가 (일반적으로) 주에서나 연방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(조지아 운전면허증, 조지아 신분증, 미국인 여권, 유효한 I-94)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, 용의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 외국정부 기관에서 발행된 영사 신분증, 영사의 입학허가나 신분증은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.

- 합법적인 서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, 경찰은 용의자를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다. 용의자가 이민 서류 미비자로 확인될 경우, 경찰은 곧바로 연방 교도소나 주 교도소로 용의자를 수송해서 구금할 수 있으며 국토안보부에 용의자를 신고할 수도 있다.
 - **예외: 주(州) 또는 지방 경찰에게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, 범죄의 목격자로 나서기 위해 또는 범죄의 피해자로 “선의(善意)”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민 신분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**

- **“보안 커뮤니티(Secure Communities)”와 287(g) 프로그램을 통한 경찰권력(제9-11조):**

287(g) 프로그램은 지방경찰과 보안관에게 연방이민 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 현재 캡, 귀넷, 휘트필드와 홀 카운티는 287(g) 협약을 수속했다. “보안 커뮤니티 (S-Comm)”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 등록되거나 체포되는 모든 사람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다. 거의 모든 애틀랜타 대도시권 카운티들은 “보안 커뮤니티(S-Comm)”를 가지고 있으며 2013년 9월까지 조지아 주 전체에서 “보안 커뮤니티(S-Comm)”를 실시하게 된다.

- 제9조는 ‘선의’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찰들이 어떠한 손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. 제 11조는 인세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,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보조금도 지급한다.

- **공공복지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신분을 증명해야 함(제 17조):**

성인교육, 의료 혜택, 비즈니스 및 주택 대출을 포함한 “공공복지 혜택”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모든 신청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. 불법체류자의 부모를 둔 시민권 자식들도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<HB 87 새로운 범죄의 설정>

- **고용자를 얻기 위해 거짓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은 신원 사기로 가중처벌(제4, 5, 6조):**

처음으로 이 법을 어기는 위법자는 최대 1-10년의 징역형 또는 10만불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. 두 번 이상 법을 위반할 경우, 3-15년의 징역형 또는 25만불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. 21세 미만의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, 1-3년의 징역형 또는 5천불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.

- **서류미비 이민자의 은닉이나 운송의 경우 (제7조):**

첫 위반이며, 7명이하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운송하는 자는 1년의 징역형 또는 1천불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. 두 번째 위반인 경우 또는 8명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운송하는 자는 1-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불-2만불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.

- “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” 서류 미비자를 운송함으로써 형사법을 위반할 경우 (서류 구비자 또는 서류 미비자인 것과 관계 없이) 위반한 자는 유죄이다. 교통위반 사례는 “범죄 행위”로 간주된다.
 - **예외: 서류미비 이민자를 운송하는 자 중 (1) 정부 업무의 일환으로, 그리고 (2)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공청회의 요청으로 운송했으며 (3) 운송자는 “합법적으로 고용된” 자이며 (4) 운송자의 고용인은 “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”를 제공하는 사람일 경우.**
- 조지아 주에 “고의로” 서류미비 이민자를 은닉하거나 “실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” 형사법을 위반하는 자는 유죄로 판명된다.
 - **예외: (1) 유아, 어린이, 범죄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는 (2)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또는 (3) 형사사건의 법적 대리인이거나 (4) “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” 기관에서 서류미비자를 은닉하는 경우.**
법은 위에 언급된 “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” 기관이 어떠한 기관들인지 정의하지 않고 있다.

- **서류미비 이민자를 돕는 행위:**

서류미비 이민자의 신분을 '알면서' 그 이민자를 조지아 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. 서류미비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.

<HB 87의 필수조건>: 모든 공공 고용주, 공공 계약자/하청업체, 민간 고용주는

이 정보는 법률 자문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 (Advancing Justice - Atlanta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 전화번호는 404.585.8446이며 이메일 주소는 Info@AdvancingJustice-Atlanta.org 입니다.

E-Verify (전자신분인증제도)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(제 3조, 12조).

- E-Verify (“E-인증”)란?
연방정부의 자발적인 전자 고용인 확인 프로그램입니다. E-인증 프로그램은 오류 발생률이 높으며 고용주에게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. E-인증은 새로이 채용되는 풀타임 직원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. 여기서 “풀타임”이라 함은, 주3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E-Verify (“E-인증”)가 필요한 경우:
사업허가증을 신청 및 재 신청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세 증명서 및 다른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합니다. 이에 대한 증명은 사업자의 E-신분인증제도의 사용자 번호와 사용권한 날짜를 포함하고 있는 서명된 진술서로 사업허가증을 담당하는 기관에 전달됩니다.
- E-Verify (“E-인증”)에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:
사업허가증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사업허가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 고의로 거짓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업체는 1천불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-5년 감옥형에 처해집니다. 정부관련기관의 경우라도 이를 위법할 시,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E-Verify (“E-인증”)에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막을 수 있는 방법:
E-인증 요구사항에 준수하기 위해 “선의”를 가지고 행동하며 요구사항에 준수할 수 있도록 “합리적인 시도”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범죄혐의로 기소되기 전까지 사업체가 E-인증의 요구사항에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체에게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.